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 6.13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당의 진로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 6.13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당의 진로 -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 약	1
I	6.13 지방선거의 빅 퀘스천	4
	○ 90년 체제의 종식?	5
	○ 4당 체제의 종식?	8
	○ 유권자 지형의 전환?	11
II	90년 체제의 정치동학	15
	○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	17
	○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	18
III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	22
	○ 정치이슈 프레임	23
	○ 정치주기 프레임	26
	○ 정당체제 프레임	29

표목차

〈표 1〉 기초단체장 정당별 당선인수	6
〈표 2〉 시·도의회 의원 정당별 당선인수	7
〈표 3〉 5.9 대선 후보득표율과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 득표율 비교 ..	10
〈표 4〉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 유권자 이념성향 분포	12
〈표 5〉 세대별 투표에 대한 생각	26

그림목차

[그림 1] 대선 및 세대별 자기이념 평가	13
[그림 2] 6.13 지방선거 민주당 투표자의 이념성향	14
[그림 3] 10대 정책영역별 중요성 평가 및 정책 평가	25



○ 6.13 지방선거의 빅 퀘스천

-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2016년 4.13 총선, 2017년 5.9 대선에 이은 전국선거 3연승이자 지역분열과 한반도냉전을 영속화, 대한민국을 위축시키는 90년 체제 종식의 정치적 가능성
- 90년 체제가 호남고립과 한반도냉전에 기초한 위로부터의 정치공학적 3당 합당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자연스런 3당 합당
-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으로 분열되었던 ‘촛불 부동층’이 한반도평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안식처로 선택, 민주당의 압승
- 지난 대선에서 탄핵에 반대한 극단적 지지층에 영합한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시 한반도평화에 반대한 극단적 지지층에 영합,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결과와 유사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얻었던 득표의 대부분을 상실. 촛불혁명에 이어 재차 한반도평화를 주도한 민주당이 안철수, 유승민 지지자의 상당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지지기반 소실 상태
- 유권자의 지지성향, 투표성향, 이념성향으로 이루어진 유권자 지형에서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이 급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념성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에 유의할 필요
- 자유한국당은 보수성향 유권자의 일부분, 극단적 보수층만을 대변하는 주변정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진보성향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와 함께 중도성향의 대다수, 나아가 보수성향에서 경쟁가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중심정당이 되었음

○ 90년 체제의 정치동학

- 90년 체제의 정치동학,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와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 즉 ‘정치 양극화의 소용돌이’는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붕괴
-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는 이중적 정치 양극화. 시끄러운 소수간의 정치진영의 양극화이자 시끄러운 소수와 조용한 다수간의 정치 양극화로서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를 더욱 증폭
- 결국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실패에 맞서 조용한 다수는 ‘육’의 응징. 이것이 안정적인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반대로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이 극단적 쏠림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유
-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는 정권심판의 악순환, 환상과 환멸의 악순환, 승자독식의 악순환이 상호교차, 증폭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결국 여야 모두 조용한 다수의 공감을 얻기보다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에 어필하여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와 동떨어진 오만과 편견의 진영론에 매몰, 축소지향의 정치를 강행함으로써 자멸. 다만 집권전반기나 후반기나, 시기의 차이

○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

- ‘재야’의 1단계 민주화가 반독재 투쟁을 통한 군정종식이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87년 체제
-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90년 보수패권체제에 맞서 ‘야당다운 야당’의 2단계 민주화는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기초조건 확보였다면
- 오늘날 ‘중심정당’의 3단계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넘어 민주정의 ‘체제’ 개혁. 90년 체제의 정치동학에서 비롯된 정치프레임을 타파, ‘정치다운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상식을 공고화하고 정통성의 원천인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민주정

- 박근혜 대통령은 14년간 ‘무적함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끌고 야당을 주변정당화하며 중심정당의 지위에 이를 뻔 했지만 결국 자멸. 이는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극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를 악용, 정쟁을 극대화했기 때문
-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엄청난 역동성 속에서 온 국민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정의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된 관성과 낡은 경협칙, 즉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야. 이는 ‘박근혜 신화’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함
- 시끄러운 소수의 반감에 의존하는 두 국민 반사 이슈에 몰두, 조용한 다수의 공감을 받는 온 국민 전환 이슈를 경시하는 ‘정치이슈 프레임’, 집권 3년차 이후 정권심판론이 작동, 불가피하게 레임덕에 빠지고 마는 ‘정치주기 프레임’, 야권이 약화되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자멸하고 마는 ‘정당체제 프레임’을 극복해야
-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은 5년 주기 대통령임기, 10년 정권교체 주기의 ‘정권연장의 정당’이 아니라 30년 주기의 ‘시대교체의 정당’을 자임해야. 이를 위해 ‘민생 중심정당’, ‘화이부동(和而不同) 중심정당’, ‘협치 중심정당’임을 평소 실력으로 증명해야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 6.13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당의 진로 -

이진복(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I 6.13 지방선거의 빅 퀘스천

○ ‘대한민국 중심정당’

- 2016년 4.13 총선, 2017년 5.9 대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국선거 3연승과 집권 1년간 정부·여당의 압도적 지지로 우위는 민주당을 대한민국 중심정당화, 야당을 주변정당화
- 현재의 정치적 추세는 상시적 정권교체의 여야 정당체제로부터 확장적 여당인 중심정당과 한계적 야당인 주변정당의 중심·주변 정당체제로 전환되는 징후일 수 있음
-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합의수준에 이르고 양자택일 기성 정치진영을 파괴하는 ‘온 국민 전환 이슈(one nation transformational political issues)’를 대변, 주도함으로써 자연스런 여당으로 부각. 주변정당은 이에 반대하는 시끄러운 소수에 영합함으로써 수권능력을 상실한 항의정당으로 인식
- ‘이게 나라냐’는 촛불혁명 등, 온 국민 전환 이슈는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30년 주기의 시대창설적 파급력. 물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4.19 혁명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왜곡되고 ‘군정종식’의 6월 항쟁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왜곡. 반면 현재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선거를 통한 정당체제 재편 가능성
- 따라서 중심정당은 5년 대통령 임기, 10년 정권교체 주기를 넘어 30년 주기의 시대교체 정당, 90년 체제를 넘어서는 탈90년 체제 정당
- 중심정당은 보수 또는 진보 진영의 정당이 아니라 온 국민 전환 이슈에 공감하는 지역, 성, 직업, 생활수준, 이념성향 등을 초월,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포용적 국민정당. 고정 지지층과 부동층의 압도적 지지만이 아니라 경쟁정당 지지층이 상당수 지지를 하고 주변정당의 고정지지층까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온 국민정당
- 미국, 북유럽, 일본 등의 중심·주변 정당체제, 1.5당 체제 사례를 볼 때, 중심정당은 유능한 여당과 건설적 야당의 여야 기능을 모두 하는 1.5당, 주변정당은 집권이 아니라 당권에 집착하는 0.5당
- 중심·주변 정당체제는 타협의 정치, ‘협치’가 아니라 대결의 정치, ‘대치’가 오히려 격화되는 역설. 야당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는 중심정당은 오만해질 수 있고, 자중지란에 빠진 주변정당은 여당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통해 단일대오를 유지, 생존하려하기 때문

○ 90년 체제의 종식?

-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단순한 압승을 넘어 '90년 체제' 종식의 정치적 가능성
-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TK와 PK의 보수적 지역연합, 지역 콘크리트 지지층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부상. 지역을 초월해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포용적 중심정당'의 가능성
-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온 국민의 꿈은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과 YS, JP의 3당 합당, 민주자유당의 창당으로 인해 왜곡. 호남차별과 신공안정국에 기초한 보수대연합을 통해 '패권적 중심정당' 완성. 지역분열과 한반도냉전을 영속화, 대한민국을 위축시키는 강고한 보수패권체제 구축
- 특히 TK와 PK의 보수적 지역연합은 5060세대의 보수적 세대연합과 함께 민자당 이후 새누리당까지 보수진영의 고정 지지기반,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곳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14곳에서 승리. 특히 PK지역, 부울경 시·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
- 민주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나아가 TK지역에서도 선전
-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2곳에서만 승리, TK지역의 주변정당으로 왜소화

○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정당별 당선자

(표1) 기초단체장 정당별 당선인수

		총수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수도권	합계	226	151	53	0	5	0	17
	서울	25	24	1	0	0	0	0
수도권	인천	10	9	1	0	0	0	0
	경기	31	29	2	0	0	0	0
충청권	대전	5	5	0	0	0	0	0
	충남	15	11	4	0	0	0	0
	충북	11	7	4	0	0	0	0
호남권	광주	5	5	0	0	0	0	0
	전남	22	14	0	0	3	0	5
	전북	14	10	0	0	2	0	2
PK	부산	16	13	2	0	0	0	1
	울산	5	5	0	0	0	0	0
	경남	18	7	10	0	0	0	1
TK	대구	8	0	7	0	0	0	1
	경북	23	1	17	0	0	0	5
강원도	강원	18	11	5	0	0	0	2

자료: 선관위

-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대구·경북(자유한국당), 제주도(무소속)를 제외하고 17곳 중 14곳을 석권, 시·군·구 기초단체장 67%를 차지.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이 당선.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80곳에서 거의 2배로 급신장
- 자유한국당은 시·군·구 기초단체 53곳에서만 이겼을 뿐이고,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117곳에 비해 2배 이상 격감
-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단 한 곳도 얻지 못했고,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5곳 당선. 특히 안철수, 유승민 2명의 대선후보가 소속된 바른미래당의 몰락은 극적
- 민주당은 서울 구청장 25명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승리. 인천 구청장 10명 중 9명, 경기 시장·군수 31명 중 29명이 당선. 수도권을 '싸쓸이'
-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압승. 보수 성향의 강원도에서도 시장·군수 18명 중 11명이 승리

- 부울경 PK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승리. 부산 구청장 16명 중 13명이 승리, 울산 구청장 5명 모두가 승리, 경남에서도 시장·군수 18명 중 7명이 승리, 선전
-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시장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안동시장 선거에서 2위를 차지,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등, 선전

○ 6.13 지방선거 시·도의회 의원 정당별 당선인수

(표2) 시·도의회 의원 정당별 당선인수

		총수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지역	합계	737(87)	605(47)	113(24)	1(4)	1(2)	1(10)	16
	수도권							
	서울	100(10)	97(5)	3(3)	0(1)	0(0)	0(1)	0
	인천	33(4)	32(2)	1(1)	0	0	0(1)	0
	경기	129(13)	128(7)	1(3)	0(1)	0	0(2)	0
충청권	대전	19(3)	19(2)	0(1)	0	0	0	0
	충남	38(4)	31(2)	7(1)	0	0	0(1)	0
	충북	29(3)	26(2)	3(1)	0	0	0	0
	세종	17(2)	16(1)	0(1)	0	0	0	0
호남권	광주	20(3)	20(2)	0	0	0	0(1)	0
	전남	52(6)	50(4)	0	0	1(1)	1(1)	0
	전북	35(4)	34(2)	0	0	0(1)	0(1)	1
PK	부산	42(5)	38(3)	4(2)	0	0	0	0
	울산	19(3)	15(2)	4(1)	0	0	0	0
	경남	52(6)	31(3)	19(2)	0	0	0(1)	2
TK	대구	27(3)	4(1)	23(2)	0	0	0	0
	경북	54(6)	7(2)	38(3)	0(1)	0	0	9
강원/	강원	41(5)	32(3)	9(2)	0	0	0	0
제주권	제주	31(7)	25(4)	1(1)	1(1)	0	0(1)	4

자료: 선관위.()는 비례대표

-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78%를 석권. 광역의원 824명 중 652명이 당선. 사실상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싹쓸이’
- 자유한국당 당선자는 137명에 불과, 바른미래당은 5명, 민주평화당은 3명, 정의당은 11명 당선
- 민주당은 PK에서 압승. 부산 시의원 47명 중 41명 당선, 울산 시의원 22명 중 17명

당선, 경남 도의원 58명 중 34명 당선

- TK에서도 선전. 대구 시의회에 5명 진출, 경북 도의회에서 9명 진출

○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정당별 당선인수

-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전국적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 국회 다수당의 지위가 걸린 중대한 선거
 - ※ 수도권(서울 노원병, 송파을, 인천 남동갑), 충청권(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충북 제천·단양), PK(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경남 김해을), TK(경상북도 김천) 호남권(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11곳에서 승리. 130석으로 원내 1당의 지위를 강화
- 민주, 평화·정의, 무소속 157석으로 과반수가 넘는 '개혁입법연대' 구성 가능. 바른미래당이 함께한다면 탄핵찬성 국회연대처럼 184석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구실로 한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넘어서 수 있는 사안별 강력한 개혁 다수파 구축 가능

○ 4당 체제의 종식?

- 이번 6.13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완성, 2016년 4.13 총선의 여소야대 4당 체제를 밑으로부터 종식.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촛불혁명의 중심정당'이자 '한반도평화의 중심정당'으로 부상
- 90년 체제가 호남고립과 한반도냉전에 기초한 위로부터의 정치공학 적 3당 합당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자연스런 3당 합당
-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으로 분열되었던 '촛불 부동층'이 한반도평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안식처로 선택, 민주당의 압승
- 촛불 부동층의 민주당 정착은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25% 정도의 '원(原)민주당 지지층'에 더해 20% 이상의 촛불 부동층이 '신(新)민주당 지지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
-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대통령 집권 초에 지난 대선 후보들이 전면에 등장한 특이한 선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당대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민의당 대표를 거쳐 바른정당과 통합한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 및 인재영입위원장, 유승민 바른

- 정당 대선후보는 바른미래당 대표로 지방선거에서 간판 역할
- 촛불혁명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80%의 촛불 부동층은 대선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한 대선후보, 문재인(41.08%), 안철수(21.41%), 유승민(6.76%), 심상정(6.17%)으로 분열되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촛불 부동층의 과반을 얻어 대선 승리
 -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해왔지만 탄핵에 찬성한 주로 50대와 PK출신, 새누리당 이탈 촛불 부동층은 안철수와 유승민을 정거장 삼아 민주당에 정착
 - 민주당에 실망해 이탈한 호남출신, 민주당 이탈 촛불 부동층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잠시 의탁했지만 정치적 고향, 민주당으로 복귀
 -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만이 아니라 정치 포지션 또한 지난 대선과 동일한 ‘어깃장 정당’.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결과와 유사
 - 지난 대선에서 탄핵에 반대한 극단적 지지층에 영합한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시 한반도평화에 반대한 극단적 지지층에 영합, 그들만의 주변정당으로 고착된 것은 당연한 귀결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얻었던 득표의 대부분을 상실. 촛불혁명에 이어 재차 한반도평화를 주도한 민주당이 안철수, 유승민 지지자의 상당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지지기반 소실 상태

○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 비교

(표3) 5.9 대선 후보득표율과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 득표율 비교

		문재인 /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유승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지역	합계	41.08/51.42	24.03/27.76	21.41+6.76/7.81+1.52	6.17/8.97
	수도권				
	서울	42.34/50.92	20.78/25.24	21.41+6.76/11.48+0.88	6.47/9.69
	인천	41.20/55.27	20.91/26.43	23.65+6.54/5.84+0.56	7.16/7.92
	경기	42.08/52.81	20.75/25.47	22.91+6.84/7.78+0.66	6.92/11.44
충청권	대전	42.93/55.21	20.30/26.42	23.21+6.34/8.90+0	6.75/7.80
	세종	51.08/59.01	15.24/17.43	21.02+6.03/10.69+0	6.14/12.85
	충남	38.62/52.47	24.84/31.55	23.51+5.55/6.40+0	6.79/7.70
	충북	38.61/51.06	26.32/31.17	21.78+5.90/6.71+0.66	6.70/8.26
호남권	광주	61.14/67.47	1.55/1.38	30.08+2.18/4.38+8.23	4.57/12.77
	전남	59.87/69.06	2.45/2.52	30.68+2.09/3.50+11.51	4.01/8.70
	전북	64.84/68.10	3.34/3.63	23.76+2.56/3.73+9.34	4.93/12.88
PK	부산	38.71/48.81	31.98/36.73	16.82+7.21/6.73+0.43	4.85/5.44
	울산	38.14/47.00	27.46/33.28	17.33+8.13/5.24+0	8.38/6.45
	경남	36.73/45.31	37.24/38.86	13.39+6.71/5.32+0	5.32/7.66
TK	대구	21.76/35.78	45.36/46.14	14.97+12.60/10.78+0	4.72/4.34
	경북	21.73/34.05	48.62/49.98	14.92+8.75/8.26+0.63	5.17/3.89
강원/제주	강원	39.16/48.88	29.97/33.74	21.75+6.86/6.58+0.61	6.56/6.93
	제주	45.51/54.25	18.27/18.07	20.90+6.11/7.47+0	8.51/11.87

자료: 선관위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광역의원비례대표 정당득표율과 지난 대선 후보득표율을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득표율 상승이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지지층을 획득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율 상승은 10.34%임. 이는 민주당의 광역의원비례대표 정당득표율 51.42%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41.08%를 뺀 값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정당득표율 합계는 9.33%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21.41%)와 유승민 후보(6.76%)가 얻은 득표율 합계 28.17%에 비해 무려 18.84% 포인트가 격감한 수치임
- 안철수와 유승민에 실망한 촛불 부동층이 상당 부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번 지방선

거 투표율(60.2%)이 지난 대선(77.2%) 대비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표를 포기했을 것으로 추정

-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은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근소하나마 증가했음.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24.03%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27.76%를 얻었음
- 정의당의 정당득표율(8.97%)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6.17%)보다 증가. 더욱이 범진보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민중당(0.97%), 녹색당(0.70%), 노동당(0.24%)의 득표율을 합하면 진보정당 득표율 합계는 10.88%에 달함
- 진보정당의 정당득표율 상승은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 지지층의 사표심리가 해소, 본인의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

○ 유권자 지형의 전환?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압도. TK에서도 정당득표율이 30% 중반에 이를 정도로 선전한 ‘온 국민 정당’
- 촛불혁명의 정치충격으로 보수진영 이탈층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지지정당별, 직업별, 생활수준별, 이념성향별 유권자 집단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도 또한 모든 유권자 집단에서 높음
- 촛불혁명에 이어 한반도평화에 대한 온 국민의 높은 지지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몰상식한 행태로 인해 유권자의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이 급변
- 유권자 지형은 유권자의 지지성향, 투표성향, 이념성향으로 구성. 정치적 무드가 바뀔에 따라 유권자의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은 크게 바뀔 수 있지만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에 유의할 필요
- 촛불혁명의 정치적 결과인 작년 5.9 대선의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고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비슷.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치적 심판인 이번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또한 진보성향 유권자가 약간 많아졌지만 여전히 중도성향이 많고 보수성향 유권자 또한 진보성향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출구조사의 5점 명목척도와 다른 11점 등간척도에 의한 조사에서도 1992년 대선 이후 작년 5.9 대선까지 6번의 대선에서 유권자의 자

기이념 평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

- 따라서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의 정치충격은 ‘유권자의 진영간 이동은 없다’는 낡은 진영론적 고정관념을 타파. 보수와 진보의 양대진영을 동시에 붕괴시켰지만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 정치진영의 붕괴는 보수진영의 해체와 진보진영의 확장이 아니라 보수진영이 보수성향 유권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진보진영이 진보성향 유권자만을 대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성향과 보수성향 유권자 집단이 진보성향 유권자 집단보다 많음
- 자유한국당은 보수성향 유권자의 일부분, 극단적 이념층만을 대변하는 주변정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진보성향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와 함께 중도성향의 대다수, 나아가 보수성향에서 경쟁가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중심정당이 되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투표자의 이념성향은 중도성향과 진보성향 유권자가 비슷한 규모였고 보수성향 유권자 또한 일정부분을 차지했음

○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

(표4)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 유권자 이념성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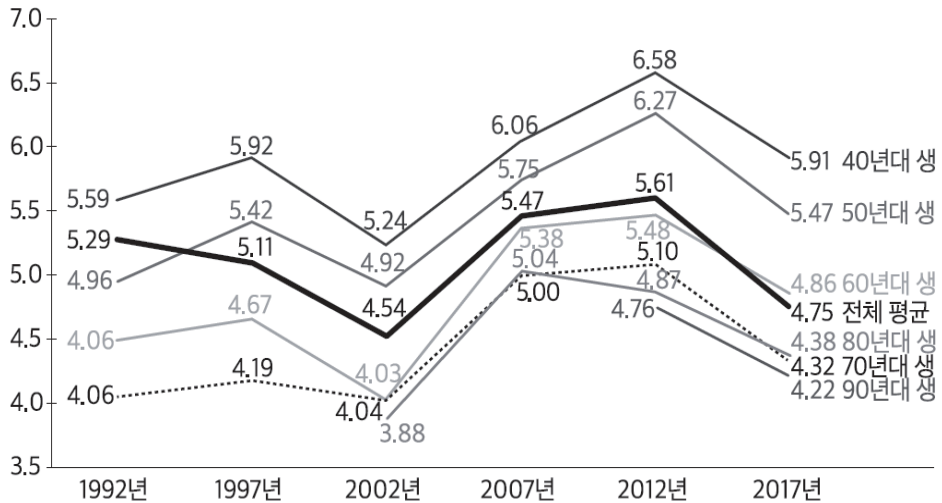
	진보	중도	보수
5.9 대선	27.7%	38.4%	27.1%
6.13 지방선거	29.2%	39.8%	24.9%

자료: 6.1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 직후 열렸던 5.9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유권자 이념성향 분포는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고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이 균형을 이룬 종모양 구조
- 중도성향 유권자가 38.4%로 가장 많고 진보성향(27.7%)과 보수성향(27.1%)은 사실상 같은 규모
-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특히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렸던 6.13 지방선거의 유권자 이념성향 분포 또한 지난 대선과 대동소이
- 중도성향 유권자가 39.8%로 가장 많고 진보성향(29.2%)이 보수성향(24.9%)보다 약간 많지만 큰 차이는 아님

○ 역대 대선의 자기이념 평가

(그림1) 대선 및 세대별 자기이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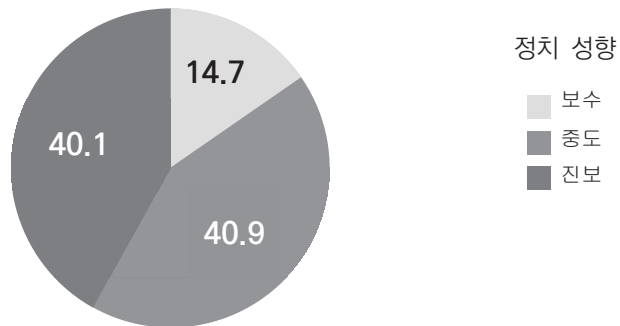


자료: 강원택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6>, 2017 p.171

- 0(매우 진보)에서 5(중도), 10(매우 보수)까지 11점 척도로 유권자의 자기이념 평가 전체 평균을 점수화하면 1992년 대선에서 지난 2017년 대선까지 6번의 대선에서 얼마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4.5~5.5 사이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
- 민주화세대로 통칭되는 1960년대생이 50대가 되면서 586세대로 변화. 보수진영을 지지해왔던 5060세대의 '콘크리트 지지층' 분열, 진보진영이 열세를 면치 못했던 5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한 것은 촛불혁명의 정치충격 일뿐 아니라 세대효과
- 그러나 586세대를 '진보적 세대'로 숙단해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승리했다고 믿거나 안정적인 중심정당이 되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경험적 증거에 반함
- 586세대는 과거에도 그리 진보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리 보수적이지 않은 '이념적 중심세대'. 5.9 대선에서 586세대의 이념 평균은 4.86으로 약한 진보적 성향. 중도(5)에 근접해있고 중도 단일 색깔이 아니라 중도와 진보, 보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념적 혼재 세대'

○ 민주당 투표자의 이념성향

(그림2) 6.13 지방선거 민주당 투표자의 이념성향



자료: 6.13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는 중도성향(40.9%)과 진보성향(40.1%) 유권자가 비슷했고 보수성향 또한 일정부분(14.7%)을 차지했음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특성은 여론조사결과 및 선거결과, 즉 유권자의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이 요동치고 엄청난 역동성과 극심한 불안정성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소용돌이 민주주의’, ‘썰림 민주주의’, ‘욱 민주주의’, ‘우뇌 민주주의’, ‘심정 민주주의’, ‘홍수 민주주의’, ‘바람 민주주의’

① 소용돌이 민주주의

- 소용돌이 민주주의는 강력한 대통령 권력의 소용돌이 효과에 의해 모든 지역·부문정치가 1극 정치로 빨려 들어감으로써 1극 구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체 해결능력을 상실한 취약한 민주주의
- 공적 소통의 ‘직거래 문화’로 인해 가공할 역동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불안정성이라는 한계 노출

② 썰림 민주주의

- 썰림 민주주의는 어느 쪽이 좋아서 썰리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대한 반감으로 덜 반감을 느끼는 이쪽으로 과도하게 썰리는 민주주의
- 가장 어리석은 일은 썰림 현상을 이념적인 틀로 해석하는 것. 이쪽으로 썰리면 진보의 승리요, 저쪽으로 썰리면 보수의 승리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크게 실수하는 것
- 유권자들도 반감에 따른 급격한 좌향좌·우향우식의 썰림을 보여 놓고선 뒤늦게 직접행동으로 그걸 교정하려고 함

③ 욱 민주주의

- 욱 민주주의는 잠자코 인내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시에 ‘욱’하고 폭발하는 패턴의 민주주의
- 겸허한 자세로 진지한 소통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욱’의 저주를 받게 돼 있음. 한국인의 ‘욱 역동성’은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최소한의 자존감

④ 우뇌(右腦) 민주주의

- 우뇌 민주주의는 감성과 직관을 담당하는 우뇌처럼 정치가 논리와 이성보다 감성과 직관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물갈이 경쟁’으로 전도되고 정당의 ‘포장마차화’

⑤ 심정(心情) 민주주의

- 심정민주주의는 '평소 실력'보다 그 어떤 계기에 의한 '심정의 폭발'이 더 중요한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심정이 폭발한 시위. 합리적 방법의 의사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는 현실에서 이성애 호소해 봐야 별 소용없음

⑥ 홍수 민주주의

- 홍수 민주주의는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홍수가 님을 때에 좋지 않은 것들을 일거에 해치우려는 민주주의
- 보수운동이든 진보운동이든 대체로 공유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 광범위한 운동적인 동원을 통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⑦ 바람 민주주의

- 바람 민주주의는 언제 어디서 왔다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성과 한번 불었다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여 판세를 좌우하는 민주주의
- 바람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의 산물, 초강력 중앙집권체제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엔진. 과잉정치화와 네거티브 투표 행태 만연.(강준만. <현대정치의 겉과 속>. 2009)

○ 90년 체제와 '정치 양극화의 소용돌이'

- 90년 체제의 정치동학,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와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 즉 '정치 양극화의 소용돌이'는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붕쇄
- 정치 양극화의 소용돌이는 승자독식(勝者獨食), 패자전실(敗者全失)의 대권을 둘러싼 소용돌이이자 정당정치의 무력화, 국회파행의 일상화에서 비롯되면서 다시 이를 악화시키는 90년 체제의 정치동학
- 장기집권 방지와 대통령직선 실현이라는 최소 요구에 초점을 맞춘 87년 권력구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5년 단임의 '민주적 박정희'를 이상화. 이는 '민주화 영웅', 양김의 정치적 꿈과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결합,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유일 목표
- 국가수반(국가원수)과 행정수반(정부수반)을 겸함과 동시에 초강력 중앙집권체제를 구현하는 국민직선의 단임 대통령은 역성혁명이 가능한 계몽군주제 제도화.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전국시대화, 엄청난 역동성과 극심한 불안정성 유발
- 결국 대권의 '절대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패권적 3당 합당의 90년 체제를 헌정적으로 잉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 대권의 강력한 구심력은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무력화, 포장마차형 정당 양산. 대통령 및 유력 대권주자의 1인 지배 정당 및 계보정치 현상을 고착화
-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 정당의 이합집산, 당명이 수시로 바뀜. 이에 따라 당에 먼저 들어오면 조만간 구태가 되고 마는 '선당구태(先黨舊態)'의 악순환
- 승자독식의 대권은 여야관계를 문제해결을 위한 경쟁관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적(友

敵)관계로 변질, 사생결단의 무한투쟁 야기

- 입법부인 국회가 대권고지를 향한 베이스캠프로 전략함으로써 국회 또한 여야대결을 피할 수 없고, 타협의 정치 실종. 국회파행 일상화,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
- 따라서 경륜을 구태와 동일시하면서 경험의 축적과 활용이 불가능한 '물같이 만능론', 진영론에 사로잡혀 타협을 부역질로 여기는 '네거티브 만능론'의 제도화, 예측불가능한 역동성에 올인하면서 민생을 경시하는 '한탕주의' 정치문화 만연

○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

-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는 이중적 정치 양극화. 시끄러운 소수간의 정치진영의 양극화이자 시끄러운 소수(shouting minority)와 조용한 다수(silent majority)간의 정치 양극화로서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양극화를 더욱 증폭
- 정치권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을 공론장에서 주도하는 시끄러운 소수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열성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정치계급(political class)
- 시끄러운 소수는 존재감의 정치 마인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진영론에 입각하여 극단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51% 전략'과 타협을 적대시하여 소수는 환호하지만 다수가 불신하는 '100% 전술' 추종
- 정치의 의제유지(agenda keeping)를 이심전심의 공감대 속에서 결정하는 조용한 다수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
- 조용한 다수는 공감의 정치 마인드. 문제해결을 목표로 온 국민이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추구하는 '100% 정치관'과 타협을 통해 누구도 만족할 수 없지만 누구나 수긍하는 '51% 정치력'을 열망
- 시끄러운 소수는 일상적 정치과잉 상태. 정치불신의 방향은 반대진영에 국한. 모든 이슈를 진영의 유불리로 해석, 분노의 이슈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진영의 반사이익에 집착
- 조용한 다수는 일상적 정치불신 상태. 정치과잉은 간헐적이지만 어느 순간 누구든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면 폭발적인 응징. 기성정치 일반에 냉소적이면서 희망의 이슈에 민감
- 시끄러운 소수의 보수 대 진보, 좌파 대 우파의 정치진영의 양극화는 타협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유발, 정치의 정쟁화

- 정쟁은 조용한 다수의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참여를 저하, 시끄러운 소수가 정치를 독점하게 함으로써 정치를 더욱 양극화하는 악순환 야기
- 결국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실패에 맞서 조용한 다수는 ‘욕’의 응징. 여론조사, 투표, 나아가 거리, 광장에서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문제유발자를 응징
- 이것이 오랫동안 양극화되지 않은 종모양의 정규분포 상태에 있어왔던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반대로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이 극단적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유
- 시끄러운 소수, 엘리트의 양극화(elite polarization)가 조용한 다수, 대중의 양극화(popular polarization)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 조용한 다수의 이념 위치(positions)가 양극화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음. 다만 대중이 평가하는 정치계급이 양극화됨에 따라 대중의 선택(choices)이 양극화되었을 뿐. 따라서 양극화된 정치계급이 조용한 다수가 양극화된 모습(appearance)을 갖도록 했음
- 더욱이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발달로 일상적 정치과잉 성향의 열정적 소수가 자신과 같은 극단성을 공유하는 사람을 쉽게 찾고 가려낼 수 있는 상황(sorting out)에서 정치 양극화는 근본주의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
- 정당은 이기기 위해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공감을 얻어야.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의 정치와 조용한 다수의 공감의 정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 상호강화 관계. 조용한 다수의 공감을 얻을 때만 존재감의 ‘사이다’ 효과 발휘. 그렇지 못할 때는 혐오의 ‘관종’

○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

-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는 정권심판의 악순환, 환상과 환멸의 악순환, 승자독식의 악순환이 상호교차, 증폭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정권심판의 악순환’은 정권교체의 주요 동인이 야당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반감, 즉 정권심판론이었다는 사실에 근거. 대체로 전임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존하는 여당은 집권 후반기에 자멸하

- 고 유력한 차기대권주자가 없다면 현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존하는 야당은 전반기에 자멸
- 여당은 전임 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존, 제도개혁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거나 국민의 삶의 문제를 등한시. 국정외 성과가 없는 것도 야당 탓하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민심 외면. 결국 국정 총책임자로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응징을 받음
 - 야당은 국가적 파국 또는 민생악화를 내심 원하면서 스캔들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 국익과 민생의 초당적 국정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사이익의 정치행태. 역시 국민의 응징을 받음
 - ‘환상과 환멸의 악순환’은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해 실행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거나 호언장담하는 경향. 여당과 야당의 현격한 지지도 격차는 여당과 야당을 공히 시끄러운 소수의 환상에 사로잡히도록 함으로써 조용한 다수의 환멸을 야기
 - 집권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독선에 빠지고 독주. 실감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의 정치를 함으로써 결코 부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대수준을 더욱 인플레이션, 국민의 환멸을 자초하는 자승자박의 정치행태
 - 야당은 패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철저한 혁신 대신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으면 뚝뚝 뭉쳐서,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다면 당내 자중지란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 대한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시끄러운 소수의 환상에 영합하는 증오의 정치 강행, 역시 국민의 환멸을 자초하는 자승자박의 정치행태
 - ‘승자독식의 악순환’은 대권을 둘러싼 권력구조적 문제, 정권심판의 악순환과 환상과 환멸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권력구조적 토대
 - 승자독식의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onflict)’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에 몰두하는 ‘갈등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conflict)’를 통한 정략적인 승리지상주의, 정쟁을 격화하는 ‘승부사 정치’ 고착화
 - 대통령은 권력이 막강한 만큼 책임도 무한책임에 가까운 대통령 ‘무한책임제’ 구조화.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문화 속에서 대통령은 ‘동네북’같은 존재로 전락. 더욱이 단임제 대통령제는 집권 후반기

부터 심각한 권력누수 야기

- 사실상 대통령 ‘무한책임제’를 대통령 ‘무책임제’로 전도시킴으로써 ‘실패한 대통령의 저주’ 제도화. 이를 막기 위한 여당의 대통령 ‘사당화’는 4.13 총선의 ‘진박역풍’에서 보듯 모든 전문가의 예측을 비웃고 조용한 다수의 응징
- ‘실패한 대통령의 저주’는 반감과 자멸의 소용돌이를 격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만다는 정치적 저주는 야당이 협치가 아니라 대치에 주력하는 ‘발목잡기’ 행태 관성화
- 국정실패에 책임이 있는 야당의 구태는 국민의 외면을 받아 지지도 추락, 주변정당으로 왜소화. 야당을 더 이상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는 여당은 순혈주의와 계몽주의의 독단에 사로잡혀 정권심판론 자초
- 야당의 정권심판 네거티브는 여당이 전임 대통령과 결이 다른 YS, 노무현, 박근혜와 같은 차별성 있는 대선후보를 선출한다면 정권심판 타겟 상실, 여당의 재집권. 이것이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의 이면
- 정권교체에 실패한 야당은 더욱 지리멸렬하고 재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기고만장. 야당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극단적 반감에 몰입하면 자멸하고, 여당이 우월감에 빠져 민심을 무시한다면 역시 자멸
- 결국 여야 모두 조용한 다수의 공감을 얻기보다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에 어필하여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와 동떨어진 오만과 편견의 진영론에 매몰, 축소지향의 정치를 강행함으로써 자멸. 다만 집권 전반 기냐 후반기냐, 시기의 차이

○ ‘박근혜 신화’

- ‘박근혜 신화’는 참여정부 이래로 14년간 박근혜가 나서면 이긴다는 ‘불패의 신화’. 그것도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선방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더구나 경쟁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우위로 안정감을 어필하는 ‘선거의 여왕’
 - 박근혜 신화의 회자와 해체는 정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승리할지라도 결국 정치에는 패배한다는 정치 양극화의 소용돌이에 대한 극적 사례. ‘가장 강할 때, 자멸한다.’
- ※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부가 약화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화되어, 외부로부터 정권에 도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도전이 가장 약했던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힘과 기제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무력화는 권력이 갖는 하나의 패러독스를 보여 준다. 억제되지 않는, 한계를 모르는

권력이 터무니없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최장집 등, <양손잡이 민주주의>, 2017)

- 또한 박근혜 신화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에게 어떻게 민주당이 연전연패했는가에 대한 성찰의 사례이자 선거승리 자체가 아니라 국민공감·국민체감·국민실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국선거 3연승의 민주당에 대한 반면교사의 사례
- 박근혜 신화는 적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고 적이 있어야 존재하는,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 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적대적 공생에 근거. 따라서 박근혜 신화의 근본 특징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두 국민 정치(two nations politics)’, ‘51% 정치’
- 일관된 마이웨이 노선을 통해 상대정당 열성지지자에게는 적개심을, 박근혜 열성지지자에게는 환호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혐오와 안정감 추구를 유발
- 박근혜의 정치는 정치불신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反정치이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실종의 정치’. 박근혜는 증오와 공포의 시대, ‘난세의 정치’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민생을 살리는 ‘치세의 정치’에는 무능하고 무기력
- 대치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 대치상황을 유발. 국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인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화함으로써 더욱 악화. 민생 vs 정쟁 구도로 민생 이슈를 야권공격용, 국회공격용으로 사용
- 어떤 상황에서도 공세적으로 심판론 제기, 맞불 대응. MB심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12.19 대선에서조차 야당을 상대로 ‘친노 심판론’ 제기, 대통령으로서도 지속적으로 ‘발목잡는 야당 심판’ 호소
- 적으로 삼을 야당이 무력화되자 ‘일하지 않는 국회심판론’ 제기.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왕따’. 심지어 타협을 했다는 죄로 그것도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국무회의 석상에서 자당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심판 호소. 나아가 선거를 진두지휘할 자당 대표를 적대
- 2016년 4.13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분당과 압도적 지지도 우위 속에서 총선 승리를 기정사실로 자만, 더 이상 야당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고 기고만장하여 당내 비주류를 적으로 삼는 정치적 자해, ‘진박공천’ 자행. 대규모 지지층 이탈로 누구도 예측 못했던 총선 참패
- 박근혜 신화의 승리 공식은 ‘박근혜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 역설적으로 패배 공식은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박근혜의 패배’
- 박근혜 신화는 외부의 적이 없어지자 내부에서 적을 찾아 공격하는 정치적 자멸로 인해 붕괴.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겼던 ‘선거의 여왕’이 누구나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선거에서 정치적 자멸

III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

○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정

- 민주주의는 democracy의 잘못된 번역으로 특정 유형의 통치체제를 가리키는 개념. 민주주의란 democratism으로 표기될 수 있는 이념이라기보다는 democracy, 즉 '민주정'이라는 사실. 귀족정(aristocracy), 과두정(oligarchy), 왕정(monarchy)처럼 democracy는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체제로서 '민주정'.
- “고대 그리스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데모(스)’와 ‘크라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민중 스스로의 통치(체제) 또는 민중 스스로의 정부를 뜻한다. 서양에서 데모크라시는 그것의 현대어이다. 그런데 동양에서 이 용어를 수입하면서 ‘민주주의’라고 번역했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형태로 번역한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democracy)를 이해하는데 많은 오해가 생겼다고 본다.”
- “운동으로서의 민주화를 말할 때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만,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이 집권을 다투게 되었을 때는 민주정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했다.”
-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차원은 ‘선거와 선거 사이’라는 두 단계 내지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인 선거의 시기는 정당 간 경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두 번째 단계는 선거 경쟁의 승자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단계이다. 그것은 곧 거대한 행정관료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자신들의 비전과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최장집 등, <양손잡이 민주주의>, 2017)
- democracy가 민주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잘못 통용된 배경은 건국과 호국 시기에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항한 이념정립 차원, 산업화 시기의 엄혹한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의 신념표현의 차원일 수 있음
- 87년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화가 실현된 시점에서 민주주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민심이 천심’이라는 상식을 대변. 17년 ‘이게 나라냐’는 촛불혁명에 응답, 또 다른 30년의 시대적 과제는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민주정’
- ‘재야’의 1단계 민주화가 반독재 투쟁을 통한 군정종식이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87년 체제
-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90년 보수패권체제에 맞서 ‘야당다운 야당’의 2단계 민주화는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기초조건 확보였다면
- 오늘날 ‘중심정당’의 3단계 민주화는 90년 체제의 정치동학에서 비롯된 정치프레임 타파. ‘정치다운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상식을 공고화하고 정통성의 원천인 국민의 문제, 국익과 민생의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를 해결, 통치능력을 증명하는 ‘민주정’
- 박근혜 대통령은 14년간 ‘무적함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끌고 야당을 주변정당화하며 중심정당의 지위에 이를 뻔 했지만 결국 자멸. 대한민국을 망치고 비참한 말로. 이는

-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극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를 악용, 정쟁을 극대화했기 때문. 민주정의 통치능력에서 무능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국민상식을 위반
-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엄청난 역동성 속에서 온 국민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정의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된 관성과 낡은 경험칙, 즉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야. 이는 '박근혜 신화'의 정치프레임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함
 - 시끄러운 소수의 반감에 의존하는 두 국민 반사 이슈에 몰두, 조용한 다수의 공감을 받는 온 국민 전환 이슈를 경시하는 '정치이슈 프레임', 집권 3년차 이후 정권심판론이 작동, 불가피하게 레임덕에 빠지고 마는 '정치주기 프레임', 야권이 약화되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자멸하고 마는 '정당체제 프레임'을 극복해야

○ 정치이슈 프레임

-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지난 1년간 민주당정부가 추진한 국정성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 특히, 한반도 운전자로서 고군분투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임 결과
-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소수의 반감에 의존하는 '두 국민 이슈(two nation political issues)'와 상대 실수로 정치적 점수를 따는(political scoring) '반사 이슈(reactionary political issues)'가 아니라 조용한 다수의 공감을 받는 '온 국민 이슈(one nation political issues)'와 중대한 민심변화에 대응하는 '전환 이슈(transformational political issues)'를 중시해야
- 민주당은 특히 온 국민 전환 이슈의 추진력이자 그 자체일 수 있는 민생 이슈에서 국민의 삶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민생 중심정당'이 되어야
- 이를 위해 정쟁 프레임의 정치면 이슈를 넘어 생활인의 희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사회면 이슈와 대한민국의 비상과 추락을 알리는 경제면 이슈에 집중할 필요
- 정치이슈 프레임은 민생 이슈, 국정 이슈, 스캔들 이슈로 이루어진 3중적 구조. 국정 이슈와 스캔들 이슈는 대체로 정치면을 장식하지만 민생 이슈는 사회면과 경제면 이슈에 잠복했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다른 계기로 정치면에 등장, 책임자를 응징
- 민생 이슈는 다른 모든 이슈의 정치적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고 나아가 조율까지 하는 볼륨 역할. 민생이 개선된다면 정부·여당이 정치적

으로 불리한 이슈의 소리는 줄어들고 유리한 이슈의 소리는 커지고, 양면적 평가를 받는 이슈는 긍정적 면이 부각

- 민생 이슈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꿈을 모두 포괄, 현재의 민생 이슈와 직결되는 기본지표는 물가관련 지표와 고용관련 지표.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가처분소득관련 지표
- 미래의 민생 이슈와 직결되는 기본지표는 교육관련 지표와 부동산관련 지표. 교육은 공정한 격차해소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자식세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람의 계층상승의 꿈. 부동산은 안정적인 주거수단일 뿐 아니라 재테크수단으로서 평범한 사람의 자산형성의 꿈
- 국정 이슈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대변하는 이슈로서 대체로 대선의 핵심 이슈와 집권당의 핵심 공약에 반영. 국정 이슈는 진영에 따라 찬반양론이 격화될 소지가 있지만 민생이 악화된다면 추진력을 상실. 따라서 국정 이슈가 '온 국민 전환 이슈'일 때, 성공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이슈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때, 온전히 힘을 발휘
- 스캔들 이슈는 정치인의 사생활 일탈이나 부정부패, 인사실패에서 세월호 참사나 최순실 게이트처럼 파국적 사건이나 치명적 국정농단까지 범위 다양. 스캔들의 부정적 파급효과 역시 민생 이슈에서 평소 실력에 반비례
-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도덕성을 체질화하는 자체 견제와 균형, 평가와 감사의 생태계를 제도화할 필요. 어쩔 수 없는 스캔들의 경우, 유능하게 수습하거나 혁신의 계기로 반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나아지고 있다는 '나라다운 나라'의 면모를 체감

○ 국민의 우선순위와 평가

(그림3) 10대 정책영역별 중요성 평가 및 정책 평가



자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정기조사(4월 18-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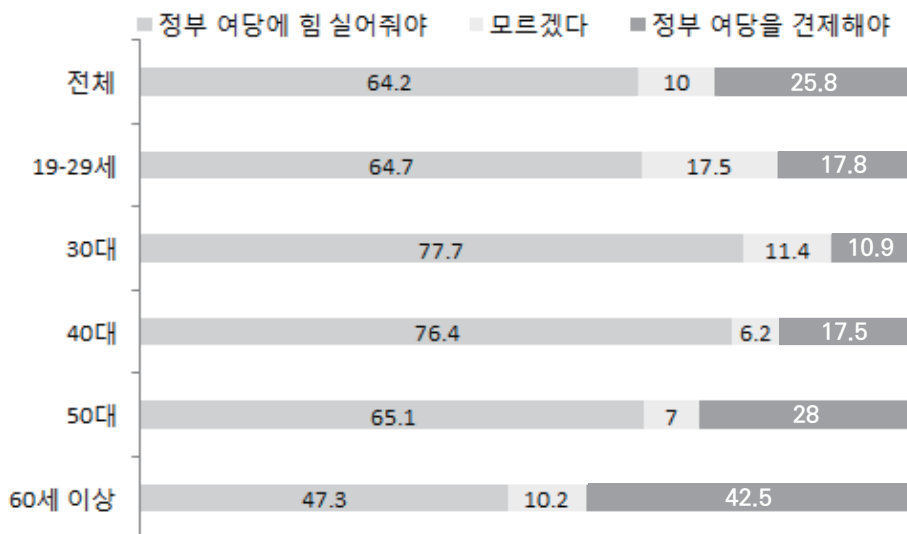
- 국민이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평가간의 불일치에 유의할 필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미는 국내 민생 문제에 못지않지만, 시민들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경제에 대한 성과에 좌우되어 왔다.”
-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10대 정책 과제 중 저출산·고령화(55%), 일자리·고용(48%) 등을 최우선 정책분야로 꼽았지만 이를 잘했다는 응답은 각각 34%, 44%로 과반에 못 미침
- 반면, 대통령의 고공지지를 이끌고 있는 대북 및 외교 분야를 정부의 최우선 정책영역으로 꼽은 응답은 33%, 32%에 그침
-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낮게 평가된 분야는 전반적 삶의 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이 상당한 역할을 한 환경을 제외하면 교육(40%), 주거·부동산(42%), 일자리·고용(44%)이었음.(정한울, 〈여론속의 여론: 문재인정부의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2018.6.18.)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도지사 후보 결정 고려 요인으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73.4%)이었음. 후보의 도덕성 문제(70.8%),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63.3%), 드루킹 댓글사건(35.3%)보다 더 높았음.(6.13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 정부의 경제정책은 유권자들이 중시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 정치주기 프레임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 집권 1년 동안 적폐청산 등, 촛불혁명의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
-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기준으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압도한 것은 이를 실증

○ 6.13 지방선거 투표에 대한 생각

(표5) 세대별 투표에 대한 생각



자료: 6.13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음.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도와 집권 1년차의 기대감을 반영
- ‘국정운동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 가운데 공감 여부를 물었을 때,
- 전체적으로 정부·여당 지원론 공감(64.2%)로 견제론(25.8%)을 두 배 이상 압도
- 세대별로 보면 50대 유권자까지 60% 중반대 이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공감. 60세 이상에서도 지원론(47.3%)이 견제론(42.5%) 보다 우세

- 민주당이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단임 초강력 대통령제에서 집권 전반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후반기에 책임을 묻는 정권심판의 정치주기 프레임을 극복해야
- 정치주기 프레임은 정부에 대한 반감의 시간차 효과, ‘국정 사이클 효과’가 작동. 집권 전반기에는 대체로 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신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후반기에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
-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의 기저에는 체감형 민생 이슈가 존재.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인식되거나 비관적 전망을 갖게 된다면 집권 후반기에 사고를 치지 않더라도 선거를 중간평가로 간주, 여당을 심판한다는 국정 사이클 효과
- 집권 2년차까지는 신정부에 대해 기회를 주자는 기대심리로 정치적 스캔들이 발생해도 지지도 하락은 미미하거나 있더라도 지지도 회복이 가능. 여당의 선거 필승
- 그러나 3년차까지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고 체감한다면 정치적 스캔들로 인한 외부 충격은 치명타, 반등 불가능. 연이은 스캔들과 지지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레임덕 초래
-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구심력으로 인해 축소지향의 정치가 국정 사이클 효과와 결합할 때, 중간평가에서 정부·여당은 파국적 상황에 직면. ‘진박공천’에서 보듯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자해’. 결국 여권의 이전투구는 지지기반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의 국정동력 상실
- 민주당이 진보성향 유권자만이 아니라 중도성향의 압도적 지지와 보수성향 유권자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지자가 민주당을 인식처로 여기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중심정당’이 되어야
- 몇십년간 남남이었던 화성인과 금성인인 남성과 여성이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 이념성향은 다르지만 지지성향과 투표성향이 일시적이라도 같은 모든 유권자가 민주당을 편안한 가정으로 여겨 정당일체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해야
- 나아가 유능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가 가정을 안정시키듯, 아니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시대에 유능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부모가 필요

하듯 민주당은 유능한 여당과 따뜻한 야당의 기능을 모두 하는 중심 정당이 되어야

○ 임기말 '중간평가의 저주'를 넘어서

- 지방선거, 특히 시·도지사 후보는 대체로 경쟁력을 우선으로 선출하는 경향. 따라서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주자의 요람이자 전반기에 여당의 승리, 후반기에 야당의 승리 공식이 적용
- 총선은 국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과 열성지지자의 극단적 순혈주의 요구가 결합, 원칙 없는 '물갈이'를 통해 민심과 이반되는 축소지향의 정치 경향
- 총선을 앞두고 거의 예외 없이 정당을 신장개업. 대선이후 곧장 실시되어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 2008년 4.9 총선의 한나라당과 야당이 분당되어 역시 압승이 예상된 2016년 4.13 총선의 새누리당만 예외. 다만 이때에도 '공천학살' 강행. 그러나 4.13 총선에서 보듯 중간평가의 선거에서 여당은 파괴적 결과
- 집권 후반기, 중간평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는 두 번의 4.11 총선, 2012년 4.11 총선과 1996년 4.11 총선이 유일한 예외
- 물론 집권 3년차인 2000년 4.13 총선에서 당시 여당, 새천년민주당이 115석을 차지, 17석의 의석을 더 얻어 선전했지만 연립여당 자유민주연합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몰락

① 2012년 4.11 총선

- MB 정권심판론이 최고조에 달해 여당 참패가 예상된,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임기 마지막 해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152석을 획득, 과반수 확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중간평가에서 과반 승리
- 야권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후보단일화를 통해 일대일 구도를 완성, MB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여당은 박근혜를 간판으로 '친이' 한나라당을 '친박' 새누리당으로 변신, 정권심판의 대상을 없애고
-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의 강령에 명문화하고 김종인, 박상돈, 이준석 등을 영입, 여당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박근혜 개인의 높은 지지도를 앞세워 '야당 견제론' 제기. 중간평가의 총선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화
- 같은 해 이어진 대선에서도 일대일 구도를 형성한 야권단일후보를 상대로 높은 투표율 속에서 민주화이후 최초로 과반수 대통령으로 당선

② 1996년 4.11 총선

- 집권 4년차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139석으로 선전. 반면 정계복귀한 DJ의 국민회의는 79석, JP의 자민련은 50석 차지
- 총선 직전해인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YS는 JP 축출,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재편하는 축소지향의 정치 강행. 민주당이 호남과 함께 서울시장을 차지하고 자민련이 충청권을

석권한 가운데 대구와 제주도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등, 집권여당의 패배이후 이어진 총선에서 선전

- 이는 이회창을 위시한 박찬종, 이수성, 이홍구, 이인제, 김덕룡, 최형우, 이한동, 김윤환 등 대권후보군 '9룡'을 영입 또는 활약하게 하면서 신한국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고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을 전격 구속하고 '골수 운동권' 김문수, 이재오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영춘,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등을 영입하는 보수진영의 파격을 통해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확대지향의 정치 때문
- 물론 충청권의 이탈은 이후 DJP연합의 정치적 근거가 되었으며, 임기말 IMF 환란을 초래한 무능은 정권교체를 당연지사로 만들

○ 정당체제 프레임

-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은 민심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 이슈를 주도하는 민주당정부의 안정감 있는 개혁에서 비롯된 여론조사 결과의 확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넘게 민주당 지지율 45% 이상,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5% 이상 지속적 유지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2016년 4.13 총선, 2017년 5.9 대선의 승리에 이은 전국선거 3연승.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득표율이 상승해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을 넘어 중심정당으로 인식
 - ※ 2016년 4.13 총선에서 민주당은 1당이 되었지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25.5%, 지역구 득표율은 37.0%에 불과. 촛불혁명 직후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2017년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08%,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51.42%
- 사실상 온 국민이 지지하는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대변, 주도하는 중심정당으로서 민주당은 5년 대통령 임기, 10년 정권교체 주기의 '정권연장의 정당'을 넘어 90년 체제의 정치프레임을 타파하는 30년 주기의 '시대교체의 정당'이 되어야
-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정치 충격은 51 대 49의 보수 대 진보 정치진영 정당체제를 80 대 20의 중심 대 주변 정치네트워크 정당체제로 재편

- 보수우위 ‘기울어진 운동장’의 토대였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파괴, ‘타일 지지층’으로 장식된 중심정당의 1부 리그 운동장과 주변정당의 2부 리그 운동장으로 분리된 ‘2개의 운동장’으로 정치양상 전환
- ‘콘크리트 지지층’이 같은 색깔의 고정지지층을 핵심으로 농도만 다른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 양당체제 지지층을 의미했다면 ‘타일 지지층’은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부동층을 근간으로 부착력이 다른 중심정당 지지층, 비슷한 색깔이지만 보수진영에 대한 실망으로 부착력이 다른 주변정당 지지층으로 이루어진 중심·주변 정당체제 지지층을 의미
- 1부 리그 운동장은 지역, 성, 연령, 직업, 생활수준, 이념성향을 초월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긍정평가하고 있는 80%의 국민이 참여, 부동층에 대한 ‘확장력’을 높이는 ‘공감’의 룰이 승패 결정
- 2부 리그 운동장은 탄핵에 반대하고 한반도평화에 부정적인 20%의 국민이 관중, 고정지지층에 대한 ‘동원력’을 겨루는 ‘존재감’의 룰이 승패 결정
- 1부 리그 우승팀, 진영을 넘어 집권기반을 공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심정당은 당연한 여당의 ‘확장지향형 대세’로 등장하고, 2부 리그 우승팀, 선거승리가 아니라 고정지지층에 영합하는 주변정당은 영원한 야당의 ‘축소지향형 쏬대’로 자족
- 2개의 운동장은 관중과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2부 리그는 1부 리그의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함. 1부 리그 중심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2부 리그 주변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지지도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지지도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면 타협의 정치, ‘협치’가 실종, 대결의 정치, ‘대치’가 심화되는 역설. 중심정당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주정당이 되고 주변정당은 정권심판에만 기대는 항의정당이 될 가능성
- 특히 지지도와 국회 의석수의 불일치 상황, 압도적 지지도의 민주당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생존권 차원에서 집권 후반기 총선을 정권심판 선거로 만들기 위해 처참한 지지도에 신경쓰지 않고 2부 리그에 안주, ‘발목잡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패에 올인할 가능성

-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공감, 공통분모, 속도 입법의 원칙하에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협치 중심정당’이 되어야. 일상적 스몰딜과 사회적 빅딜을 통해 개혁저항을 극소화하고 개혁을 가속화하여 개혁성과를 극대화하는 순리적 개혁, 자연스런 협치 중심정당
- 생활인의 절박한 민생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4당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순조로운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우선 집중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성과(소확성小確成)’를 내는 것이 중요
-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의 압도적 촛불열망에 부응,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했던 탄핵 국회연대처럼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사안별 개혁연대를 구축할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 의미와 각오

-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압도적 승리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이번 선거결과에 아주 깊은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그런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구도 속에서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로서는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를 이룬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그런 일이고, 3당 합당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그런 채찍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그리고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높아진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것입니다.”
-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에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주 냉엄한 심판으로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 그런 두려움 마음속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자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 번째는 역시 유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저는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는 정말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개인적

으로도,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협업 이런 면에서도,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자세를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늘 강조하다시피 역시 이제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여소야대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 세력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는 결코 다수의 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입니다.”
-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입니다. ... 이 태도는 저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본질인가 하면 국민들을 모셔야 하고, 국민들을 모시는 그 존재가 정치인들이고 공직자라면 그런 모시는 어떤 본질이 태도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세계나 공직 세계는 마치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하는 행동방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뭔가 국민들하고는 다른 별세계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정치를 보던 눈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그리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하고, 그다음에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2018.6.18.)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 6.13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당의 진로